

[서식 예]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

(별지) 심판청구취지 및 이유서

청 구 취 지

피청구인이 2000. 0. 0.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.

라는 재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청구인은 2000. 0. 0. 00시장으로부터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(면허번호 00 0000-0000-00)을 취득하였는데, 2000. 0. 0. 23:50경 서울 00구 00길 소재 ☆☆단란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00길 00번지 소재 ★★슈퍼 앞까지 약300m 상당 거리를 청구인 소유의 서울 0가0000호 000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당시의 음주측정결과 주취정도는 혈중알콜농도 0.125%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피청구인은 2000. 0. 0.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, 제44조 제1항,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을 적용하여 위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습니다.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청구인은 소외 00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회사동료들과 같이 2000. 0. 0. 19:30경부터 서울 00구 00길 소재 00갈비집에서 오랜만에 회식을 하면서 맥주 몇 잔을 마시고, 인근 00단란주점에서 다시 맥주와 양주 몇 잔을 마시고 2~3시간이 경과한 후 밖으로 나와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 택시를 잡기도 어려운 지역이라 같은 방향의 동료들을 태우고 약 300m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서울 00구 00길 00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것입니다.

그런데 청구인은 1971. 12. 12. 생으로서 00대학 00과를 졸업하고 1900년 경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하여 왔으며, 청구인의 전세금 000원의 전세집에서 월급만으로 처와 1명의 자녀를 부양하여 오고 있습니다. 한편 청



구인은 20〇〇. 〇. 〇.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이 사건 이외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, 영업업무의 수행상 출장이 빈번하여 기동성이 필요하므로 자가운전이 직업상 필수적입니다.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, 당시의 주취정도, 음주운전한 거리, 청구인이 영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업속성상 자가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취소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-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. 소갑 제1호증 |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|
| 1. 소갑 제2호증 | 재직증명서 |
| 1. 소갑 제3호증 | 경력증명서 |
| 1. 소갑 제4호증 | 주민등록등본 |
| 1. 소갑 제5호증 | 전세계약서 |
| 1. 소갑 제6호증 | 탄원서(회사동료) |

첨 부 서 류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위 입증방법 | 각 1통 |
| 1. 심판청구서부분 | 1통 |
| 1. 위임장(변호사선임시) | 1통 |

△ △ 지 방 경 찰 청 장

제출기관	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(행정심판법 23조)	청 구 기 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! ·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(행정심판법 27조)
청 구 인	피처분자	피 청 구 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청구서 및 부분 각1부	관 련 법 규	행정심판법
불복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(행정심판법 51조)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. 다만,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·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(행정소송법 19조, 38조)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· 다만,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(행정소송법 18조) 		